

정권교체와 발전노조의 비전

④노동조합의 가치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고 착취하는 사회, 그 착취를 지속하기 위해 차별하고 경쟁시키며 통제하는 사회, 그 댓가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세습하여 정치권력까지 지배하고 언론을 장악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상식과 표준으로 들이미는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가 사는 곳이다.

지난 9년 동안 발전현장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발전현장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자본의 이데올로기(노동자가 착취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를 펼쳤다. 복지축소,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밀어붙였고,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알짜 공기업들을 재벌에 팔았다. 또한 정권의 하수인인 사측의 경영진은 이러한 정권의 요구를 충성스럽게 수행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했고,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자신이 노동자임을 모르는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발전노조는 복수노조 출범이후 정부와 사측의 공조 하에 파괴되었다. 또한 몇몇 노조 간부들은 그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노동조합 파괴를 도왔고, 복지축소·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를 합의하였다. 꼴랑 경영평가 때문에, 인센티브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자본과 정권에 파는 것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임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노동자(계급)이다. 노동조합은 개별노사관계가 전체자본가와 전체노동자의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자각 속에 전체노동자의 입장에 서야 하며, 계급관점을 갖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영혼을 자본에게 팔아버리는 행위를 한다. 당신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기업별 노조)을 보라.

4. 한국서부발전 노·사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방향인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노·사 공동 T/F를 구성 운영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출한다.

2017. 6. 27.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사 장 김 라 랑 (인)

위원장 유 승 재 (인)

4직급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서 (서부발전노조)

합의하지 않은 성과연봉제의 폐기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 도입했던 방법(이사회 의결)으로 폐기시키면 된다.

그리고 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열어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노동조합이 경영진인가?

사측에 기생하는 노동조합 "지난 5월 18일, 19일 동서발전은 노사합동 오피니언리더워크숍 행사를 1박 2일로 진행했다. (중략) 그리고 다음 날 일정이 끝나기 전 시간을 할애 받아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대의원대회 경비를 회사 측이 부담한 셈이니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된다. 의원실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기업노조 측은 이후에 별도로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2017년 6월 15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이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측과 노동조합이 서로



간의 편의를 봐준다는 의미는 청탁 아니겠는가. 편의를 제공받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사측의 입장에 설 것이다. 당신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기업별 노조, 회사 노조)이 그 사례이다.

사용자를 찬양하는 노동조합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진솔한 파트너 한 분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용진 사장입니다.** 항상 조합을 존중하고,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며, 회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함께 발로 뛰어 다녔으며,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규제철폐 노력도 경주하였습니다.

성명서 『김용진 사장 기재부 2차관 임명을 환영하며』 중에, 2017.06.12 (동서발전노조)

투쟁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대립한다.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평화적인 노사교섭도 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민주노조를 지켜 온 앞선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노동자들이 투쟁을 멈춘다면 평화적 교섭도 불가능하다.

지난 9년 박근혜-이명박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라. 복지축소, 임금피크제 등 많은 노동조건이 후퇴하였다. 노동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어서 동의절차라도 있었다면 억울하지나 않다. 발전현장의 기업별 노조는 싸워보지도 않고 사측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정부, 사측이 두려워 투쟁하지 않는다. 이런 정부에서는 이렇게, 저런 정부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진정한 노동조합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높은 자존감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 발전노조는 다르다. 》》》》

발전노조는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또한 조합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공공성을 위한 투쟁도 해왔다. 발전노조는 선천적 기형노조(기업별 노조)가 아니다. 또한 사업소장이, 부서장이 가입을 강요하는 노조도 아니다.(회사 노무부서의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쫓불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고, 출범과 함께 정부는 노사관계에 대해 객관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공공기관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나 개인의 이익을 뛰어 넘어, 모두가 잘 살게 만드는 노동조합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이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발전노조는 다르다.



노동조합의 기본 가치

Union is strength.